Vol. 33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7. 8. 22.

▌정책동향

-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 등

▌아젠다발굴

- **현안분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이슈 브리프** ▌세계식량안보의 발전과 도전 등
- **언론 동향**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등

▌해외단신

- OECD,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국내단신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연구지원

- 2017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등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5./16./17./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8.15./20./21.) · 청와대(2017.8.16.)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7.8.17./20.)

❑ 개요

○ [농식품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8.15.]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로 인해 모든 농장 계란 출하정지, 일제검사 실시 후 합격 계란만 유통 허용

※ 2017.8.14. 1개 산란계 농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 1개 산란계 농가(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 Fipronil(피프로닐):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됨.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
◆ Bifenthrin(비펜트린):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이 기준치(0.01ppm) 허용되어 있음.

❑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추진 상황

○ [2017.8.15.현재] 2017.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 검사, 일반 농장(200개소) 정기 검사 실시 중 피프로닐이 1개 농장(경기 남양주)에서 검출※

※ 잔류허용기준이 계란의 경우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 검출

- 2개 농장(경기 광주, 전북 순창 소재)에서는 비펜트린 검출,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계란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mg/kg, 순창 농장은 0.006mg/kg 검출

○ [2017.8.16. 05시 기준, 243 농가 검사결과, 241농가 적합판정] 8.15일부터 실시 중인 전수 검사와 관련, 20만 수 이상 대규모 농가(47농가)를 포함한 총 243농가 검사 결과, 241농가가 적합판정, 2개 농가 부적합※

※ 1개 농가(강원도 철원시) 피프로닐 검출, 1개 농가(경기도 광주시) 허용된 비펜트린 기준 초과 검출

○ [2017.8.17. 05시 기준, 1,239 농가 중 876농가 검사완료, 31농가 부적합※]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 부적합 판정 받은 농가(31농가)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 추진

※ 피프로닐 7, 비펜트린 21, 플루페녹수론 등 기타 3

○ [2017.8.21. 기준, 전수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8.15.~18.) 및 추가 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

※ 8.18일 산란계농장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검사 실시 결과 417개 농가 적합 판정, 3개 농가(전북 1, 충남 2) 플루페녹수론 검출되어 출하중지, 전량 폐기 조치

정책동향

- (위해평가 결과) △살충제 5종 검출된 계란 위해평가 결과 건강에 위해우려는 없고, △살충제 5종 음식 통해 섭취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며, △피프로닐은 2.6개, 비펜트린 36.8개 매일 평생 먹어도 큰 문제 없어
- (향후 조치 계획)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난각 표시 단일화 및 생산연월일 표시,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 살충제 추가

조치 사항

○ [국무총리 긴급지시, 8.14.] 오염 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폐기, 현재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 조사 최대한 신속히 실시, 시중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조속 실시 등

○ [농식품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양계협회) 회의 개최, 8.14]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검사 강화 방안 결정

- 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에 대해서 긴급 출하 중지(8.15. 0시부터), 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 추진※

※ 동 결정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조치, 8.15.]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 수거·검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 수거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여부 점검

○ [지자체 대상 후속 조치 실시, 8.15.]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47개소)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검사 실시 지시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출장반 편성 등 시료 채취 준비 지시,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식 및 관리대장 송부
- 농관원,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지자체 및 식약청 공유 지시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농식품부(본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 구성 및 상황실 운영※(8.15.)

※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대형 유통업체) 자체 검사와 홍보 강화

○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대통령 지시, 8.16.] 이낙연 총리에게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중복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 고 지시

정책동향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8.17.] '국산계란 살충제 검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 국내산 계란 살충제 파동 관련, 농식품부·식약처에 단계별 조치사항 지시

- (주요 내용) △국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것 강조, △이번 주 안에 살충제 파동 종료되고, 계란 수급 정상화되면 연관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설 것

○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8.20.] △추가 보완검사,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 추적조사※, △부적합 농장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계란 생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발표 오류 피해 농가 구제

※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8.20일 오전 현재까지 이 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

-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 계란 살충제 파동 대응 관련 특별지시, 8.20.] 총리실 간부회의(8.20.)에 참석해 1)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처, 2)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완전하게 수습, 3) 파동이 수습되면 총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

향후 추진 계획

○ 신속·과감한 전수 조사, 위반 농가 유통 계란 회수 등 대책을 철저히 추진

○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조속히 실시, 3일 이내에 완료하여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 결과 확보

-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 허용, 부적합 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조치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실시(8월)

○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 실시

- **(대형유통업체가 자체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장에 판매 중인 계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물 설치 추진

※ 계란 유통 비율: 대형마트 36%, 가공·기타 20%, 슈퍼마켓 19%(2016년 기준, 축평원 조사)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목표(2만ha) 초과 달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6.)

○ **[농식품부, 쌀 수급균형을 위한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목표※(2만ha) 초과 달성(21,366.7ha, 계획 대비 108.3%), 8.16.]**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3.5만ha 중 논 타작물 전환 목표(2만ha) 초과 달성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에 기여, **타작물 재배 증가**로 인한 **주요 품목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향후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3.5만ha 중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1.5만ha를 제외한 목표 면적(2만ha)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 결과

- **(기관별 전환면적)** 지자체 18,023ha(목표대비 106%),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1,993(1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사업 1,350(108)

- **(품목별 전환면적)** 콩 5,261ha(총 전환면적 대비 24.6%), 사료작물 3,554(16.6), 옥수수 1,160(5.4), 고추 726(3.4), 감자 717(3.4), 인삼 658(3.1) 등

▌2017년 논 타작물 품목별 전환 면적(단위: ha) ▐

품목명	면적	품목명	면적	비고
콩	5,261	고구마	346	
사료작물	3,554	경관작물	162	
옥수수	1,160	연 근	150	
고 추	726	팥	123	
감 자	717	녹 두	58	
인 삼	658	① 시설채소/과채류	2,425	
참 깨	416	② 과실류	680	
들 깨	389	③ 기타	4,541	

※ ① (시설채소/과채류) 총 2,425ha로써 100ha 이상 품목은 수박(359ha), 딸기(243), 파(225), 토마토(206), 호박(161), 쌈채소(140), 참외(136), 고추(116), 오이(115), 배추(101) 등임.

※ ② (과실류) 총 680ha로써 50ha 이상 품목은 사과(119ha), 포도(90), 복숭아(87), 블루베리(62) 등임.

※ ③ (기타) 총 4,541ha이며 100ha 이상 품목은 휴경(2,039), 채소·과채류(994ha), 잡곡류(494), 약용작물(142), 관상수(134), 맥류(107) 등임.

※ 시·도「쌀 적정생산 추진단(단장: 농정국장)」에서 해당 시·도의 실적을 집계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행정자료임.

- **(향후 계획)**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2017년 지자체 중심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2년간 생산조정제 추진**을 통해 **2019년까지 100천ha**를 **추가**로 **감축** (2018: 5만ha → 2019: 5)

농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출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6.)

○ [농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출범, 8.17.] 농정 불신을 해소,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민간 중심으로 출범, 농정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정발전방향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발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

※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반부패 TF를 구성하여 농정 비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농정 제도·관행 청산을 추진

- (구성※)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농업인, 학계 및 소비자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역할)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평가 실시, △쌀값 회복, 가축질병 대응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 ⇒ 농정 분야 국정과제의 실효성 있는 실천 전략을 마련

▌'농정개혁위원회' 명단▐

분야	소속	직책	성명	분야	소속	직책	성명
농업인 단체 및 현장 농업인 (10)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현찬	학계 및 연구진 (8)	목포대학교	교수	최정섭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병규		고려대학교	교수	양승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건국대학교	교수	이치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고려대학교	교수	한두봉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홍기		서울대학교	교수	김관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순애		전남대학교	교수	강혜정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농정연구센터	소장	황수철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훈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창길
	한그루영농조합법인	이사	김원석	언론(1)	농민신문	사장	이상욱
	젊은협업농장	대표	정민철				
전문가 (3)	국민농업포럼	대표	정기환	지자체 유관기관 (4)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	김원석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	정명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박영범		부천원예농협	조합장	이종근
소비자 단체(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정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남 담양군수)	고문	최형식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임경숙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곽금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경북 봉화군수)	사무총장	박노욱

한국산 감귤류 대 EU 수출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4.)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 EU 수출검역요령」 제정 고시, 8.14.] 현재, 유럽연합은 EC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

※ EU 관련 규정: EC Plant Health Legislation Directive 2000/29/EC

- (주요 내용)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

농식품부 장관, 축산계열화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4.)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축산계열화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8.14.] 민관 합동으로 축산계열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실천 방안 등을 모색

※ (참석대상) (정부) 장관님(주재), 축산정책국장, 축산경영과장, (계열사업체 16개社) (육계) 하림 등 9개 업체, (오리) 다솔 등 5개 업체, (돼지) 농협목우촌 등 2개 업체 대표자, (관련협회) 육계협회장, 오리협회장

- (주요 내용)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계열화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강구

※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자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6.)

○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최, 2017.8.17.~19., COEX)] 국내외 120개 기업·기관·단체의 참여로 다양한 제품(가공식품, 화장품, 샴푸, 섬유 등)이 전시됨에 따라 국내외 유기농 산업 동향과 정부·지자체별(충북, 전남, 경남 등)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파악 가능

- 11개국 32개 기업의 해외 구매자※ 대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져 국내 유기농식품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또한 2017년 한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도 개최※※

※ 해외 주재 대사관, 각국 유기농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유기농 관련 상품 벤더(Vendor)로 구성

※※ 국내 친환경농식품 수출상담장 운영, 소비자가 참여, 국내 최고의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선발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8년 만에 자펀드 8,000억 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8.)

○ [농식품부, 2010년 농식품모태펀드(민·관 합작 투자방식) 출범 이후 8년 만에 49개 농식품 투자조합(자펀드) 8,105억 원(정부 4,542, 민간 3,563) 결성, 8.18.] 239개 경영체에 4,360억 원 투자, 표본조사결과 16%의 고용확대 효과 확인

▌투자업체(188개) 표본조사 결과(2017.5.)▐

구 분	업체수 (개)	투자금액 (억 원)	투자건수	고용인원(명)		증감	증가율(%)
				투자 전	투자 후		
농 식 품	152	2,556.8	206	6,839	7,848	1,009	14.75
비농식품	36	445.0	42	3,641	4,311	670	18.40
합 계	188	3,001.8	248	10,480	12,159	1,679	16.02

※ 표본조사결과: 【투자 전】 10,480명(평균 55명) → 【투자 후】 12,159(평균 64명) (업체 당 약 9명 신규고용 창출)

- (향후 계획) 2018년도부터 농림축산분야의 벤처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와 지자체·민간이 공동출자하여 해당지역 농식품경영체에만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를 조성

※ 「농업벤처펀드」: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조성, 농림축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농업인(법인 포함)에 중점 투자하여 농림축산분야의 벤처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

※※ 「지역특성화 펀드」: 지역 농식품경영체의 투자 수요를 반영, 2개(200억 원 규모) 이상을 조성·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자료 : 행정안전부(2017.8.17.)

○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8.17.]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16.)에서 심의·의결

※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 자체복구비 431억 원

※ 복구현황: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202, 공공시설 2,674)

- (지역별)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

- (시설별) △사유시설 복구…주택, 농경지 유실 등에 202억 원, △공공시설 복구…하천 및 도로정비 등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

※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449억 원(청주 209, 천안 180, 괴산 60)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8.16.)

○ [국무회의(8.16.)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의결]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 그 동안 입법예고(7.19.~24.), 관계부처 협의(7월 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 (구성※) 최대 25명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 정부위원으로 구성

※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

-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

- (향후 계획) △8.16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추진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2017.8.17.)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개선 추진, 8.17.]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할 예정

-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재정제도 개선 세부 내용▐

구분	지방재정제도 개선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비정규직 채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정책동향

<table>
<tr><th>구분</th><th>지방재정제도 개선 내용</th></tr>
<tr><td></td><td>•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 및 ‘전국 4대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td></tr>
<tr><td>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td><td>•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
※ (2012) 215건 → (2013) 287 → (2014) 482 → (2015) 447 → (2016) 553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2.57배 증가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
<table>
<tr><th>구 분</th><th>현 행</th><th>개편안</th></tr>
<tr><td rowspan="2">중앙심사</td><td>(시·도) 200억 원 이상</td><td>300억 원 이상</td></tr>
<tr><td>(시·군·구) 100억 원 이상</td><td>200억 원 이상</td></tr>
</table>
–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 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완화
–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
<table>
<tr><th>현 행</th><th>개편안</th></tr>
<tr><td>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td><td>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일원화</td></tr>
</table>
– 동시에 국가공기업(LH, KAMCO)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
•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td></tr>
<tr><td>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td><td>•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채무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자치단체에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
–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
–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할 계획
–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td></tr>
<tr><td>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방안</td><td>•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들 병행 마련
–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지방의회의 지적, 민원 등 발생 시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지원※
※ 위법사항 확인 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 운영
–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의 월별 실시(기존 분기별 실시) 및 예산편성, 투자심사, 채무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로 검토
–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
– 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이를 공개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체계적 채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td></tr>
</table>

자료: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8.17.)

아젠다발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

현안분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al Limit,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를 뜻함(식품의약품안전처 2016a).

○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우선 적용하였음.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계획임.

※ 견과종실류는 땅콩 또는 견과류(밤, 호두, 은행, 땅콩, 아몬드 등), 유지종실류(참깨, 들깨, 유채씨, 호박씨 등),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을 포함함.

○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0.01 mg/kg을 일괄 적용함(식품의약품안전처 2016a).

- (0.01 mg/kg 기준) 1)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2) 일부 식품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 식품에서 해당 농약이 잔류할 때(예를 들어 사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바나나에서 검출) 적용됨.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 1) 독성자료를 검토하여 일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한 뒤, 농산물 잔류자료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함.
- 2) 식품섭취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노출평가를 실시한 뒤 평생 섭취해도 이상 없는 수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 3) 식품을 통한 섭취를 일일 섭취 허용량의 80% 이내로 설정함.
- 4)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은 면제 항목으로 관리함.

❑ 일본의 농약 및 수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Yamada(2013)을 참고하였음.

아젠다 발굴

○ 일본은 2006년 5월 29일부터 농약 및 수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식품 첨가물 허용물질목록과는 구분됨.

- 농약 및 수의약품 허용물질목록은 규제·검사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농약 또는 수의약품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 농산물 잔류물질 섭취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8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항생제(antibiotics)와 항균제(antibacterials)는 잔류해서는 안 됨.

○ 농약 및 수의약품 허용물질목록은 농약 등 화학물질, 수의약품, 사료 첨가제(비타민와 사료 품질 관련 첨가제는 제외) 등을 포함함. 일본 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물질까지 망라함.

- 식품 내에 일정 수준까지 잔존해도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 「농업 화학물질 규제법」에서 규정한 농약, 다른 나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물질 등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코덱스 잔류허용기준 등을 참고하여 목록에 포함된 항목을 758개에서 799개로 확대하였고, 일괄 적용 기준은 0.01mg/kg임. 65개 품목은 면제 대상으로 고시하였음.

○ 농약 및 수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

- 1)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코엑스 기준 변경 시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움.
- 2) 단기간 섭취 시 영향 평가(short-term dietary exposure assessment)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3)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지나치게 많음.

○ 2007년 개혁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음.

- 1) 법 및 위해 기준(law- and hazard-based)에서 위험 기준(risk-based)으로 전환하여 위험 정도를 평가할 때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보다 더 활용함.
- 2) 코덱스 등 국제 규정 논의에 참여함.
- 3) 다른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4) 모든 이해관계자와 위험성을 논의하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2017.8.14.),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2017.8.15.),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2017.8.20.), “계란 살충제 성분 시도 추가 보완검사(420농가) 결과”(2017.8.21.)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내산 계란’살충제 검출 관련 조치알림” 2017.8.15. 보도자료.

_____. 2016a.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_____. 2016b. PLS 도입 설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Yamada, Y. 2013. Japan’s So-called “Positive List” of Pesticide and Veterinary Drug Resides and Related Issues.

아젠다 발굴

이슈브리프 세계식량안보의 발전과 도전

※ 미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Progress and Challenges in Global Food Security" 보고서(USDA ERS, 2017년 7월 발행)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계식량안보의 발전과 도전

〈식량안보측정〉

○ [전통적 측정지표] 전통적으로 식량안보의 네 가지 차원(식량 가용성·접근성·활용성·안정성※)을 측정하는 국가단위/가계단위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음.

※ (가용성; availability) 전체인구가 이용 가능한 식량의 양이 충분함을 의미

※ (접근성; access) 각 개인이 이용 가능한 칼로리에 대해 경제적·물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

※ (활용성; utilization) 각 개인이 섭취한 식품이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짐을 뜻함(적절한 위생 상태와 조리활동 역시 요구됨.).

※ (안정성; stability) 각 시점에서 이상의 차원들이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함.

- (국가단위 지표) 낮은 비용으로 시기적절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반면, 접근성과 활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가계단위 지표) 접근성과 활용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측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개선과제] 1) 식량안보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 2) 새로운 지표들의 정확성 평가, 3) 전통적 지표들과의 차이 해석 및 조정

〈농업생산성〉

○ 생산량과 단수 증가는 과거 수십 년 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안보를 개선한 가장 큰 요인임. 평균적으로 농업생산성 증가는 식량불안정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왔음.

○ [개선과제] 1) 국가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펀딩 조성, 2) 신기술 채택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수보험(index insurance) 활용, 3) 농산물 유통과정 상의 효율성 증대

〈농산물 무역〉

○ 무역은 기후나 자원부족으로 생산 제약이 있는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저개발 국가들은 수입이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외환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수입에 나서지 못함.

○ [개선과제] 1) 저개발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다자협정 간 적절한 조율, 2) 시장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소규모 농가 지원방안에 관한 지속적 연구 실시

아젠다 발굴

〈식량안전망 프로그램〉

○ 식량안전망 프로그램에는 현물보조, 현금보조, 농촌고용, 학교급식 등이 존재함.

- 현물보조는 특정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 가격 급증에 대처하는데 유리하나, 현금보조는 비용효과적임. 다만 저개발 국가들은 현금보조에 필수적인 식품 시장과 행정 여건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함.

○ [개선과제] 1) 비용효과적이고 다양한 식량안전망 프로그램 개발, 2) 영양·건강·도시화·취약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3) 안전망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하는 정보통신기술 사용

〈영양수준〉

○ 다양한 식품 제공은 필수 영양분 섭취량 개선을 가져옴. 영양 수준은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

- 어머니와 자녀 계층과 같이 영양적으로 취약한 인구계층이 존재하며, 깨끗한 물과 위생과 같은 비식품 요인들 역시 취약계층의 영양수준에 영향을 미침.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II)" (2017.8.1.) 중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 기구 설치	현 황	•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제시
	문 제 점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예의 주시해야 할 점은 과거에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농업 관련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고, 단지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개선방안	• 공무원이 주도하고, 구색 맞추기로 농업인 등의 민간인을 일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준정부기구가 아닌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논란	현 황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은 1988년 사회 전제에 불어 닥친 민주화 열풍 속에서 기존 대통령 임명제에서 민선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음. • 현행 간선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 명 중에서 선출한 290여 명으로 구성되는 중앙회대의원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
	문 제 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5월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현행 간선제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의 회원조합장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호선제로 변경

아젠다 발굴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실시를 요구 • 이와 같은 직선제 주장에 대해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이 제기 • 한편 협동조합적 운영이 실행되지 않는 한 중앙회장의 선출방식만으로 중앙회의 농정활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을 우려
	개선방안	• 지난 20여 년간 농협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수차례 대폭 개정되었는데,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핵심 사항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에서 여전히 개정을 강하게 요구 • 그런데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으로 하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농업협동조합법」 제5조)하여야 하므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의도는 배제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젊은 농업인력 육성 대책	**현 황**	•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지역의 확장 과정에서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 •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문 제 점	• 경지의 규모화와 고도의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결국 농업생산력의 약화, 농업노동력의 질 저하, 그리고 농촌지역의 활력소실과 침체를 초래 • 농업 경영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승계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시작부터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종자업 관리 강화	**현 황**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같은 법 제37조).
	문 제 점	• 그런데 최근 일부 농가들이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가 채종 종자, 수입종자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 계속되는 단속에도 종자의 불법판매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법 규정 적용과 단속이 필요 • 종자업 등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채 소규모로 종자를 판매, 구매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단속과 더불어 홍보를 강화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신고 간소화	**현 황**	•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 간접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농촌의 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부터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문 제 점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업인 등은 규정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주요 신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변동사항을 지역 조합에 신고 –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시간계측기 시간) 신고(1월과 7월 신고) – 전년도 농업용 면세유류 1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 생산실적 보고서(1월과 7월 신고)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2년 마다, 일부 매년) • 농업용 면세유와 관련된 농업인의 신고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필요한 절차

아젠다 발굴

	개선방안	• 면세유 관련 각종신고(사용실적, 생산실적, 농기계 일제신고, 재배내역신고 등)를 통합하고 신고 시기 조정하며,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사료용벼 재배 생산, 소비 확대	현 황	•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쌀값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쌀이나 벼를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한편 농협은 올해 김제, 고령, 당진, 강진, 고창의 5개 지역 30ha의 논에 사료용 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성을 분석할 예정
	문 제 점	• 논에서 사료용 벼 재배는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용 쌀의 생산을 줄일 수 있고, 벼를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작물의 생산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나 사료용 벼 재배는 그와 같은 우려가 없음. • 그러나 사료용 벼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료 전용벼 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 확보 – 식용벼 재배를 사료용 벼로 전환했을 때 소득 보장 – 사료용 벼 공급 대책의 지속여부에 대한 불안감 – 늘어나는 유통경비 부담 – 산지에 보관체제의 확보 – 축종별 사료급여 기술개발 – 생산–가공–소비를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확보 – 주식용 쌀로의 둔갑 방지
	개선방안	•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 – 쌀이나 벼의 사료화는 단지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으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존의 쌀이나 벼를 그대로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필요한 품종, 재배 · 가공 · 보관 · 급여 등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사료용 벼의 가격 ·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 • 쌀이나 벼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의 부정적인 생각,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농업인의 이동권 보장	현 황	•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쇠퇴하면서 농촌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빠르게 축소하고, 또한 고령자의 소득저하로 교통 서비스 이용도 큰 부담이 됨. •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100원 택시', '콜버스' 등을 운행 중에 있음. • 농식품부도 2014년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에 버스 · 택시 등을 활용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 중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 대선공약으로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 을 제시
	문 제 점	• 농촌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열악하고, 농촌지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 •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음.
	개선방안	• 각 지자체가 운행 지역,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요
미승인 유전자변형	현 황	• 2017년 5월 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채가 발견되었음.

아젠다 발굴

생물체(LMO) 유채 논란		• 농식품부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79.6톤(10개 사) 중 32.5톤(4개 사)에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문 제 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LMO를 수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과하고 미승인 LMO 유채가 유통되었다는 점에 충격을 주고 있음. •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승인 LMO 유채의 재배장소 숫자, 경운·폐기된 구체적인 내역 정보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함.
	개선방안	• 미승인 LMO 유채 검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관련 지역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유채 등의 재배상황, 식생변화 등 환경영향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학교 과일급식제 도입	현 황	• 학교 과일급식제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현재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등에서 학교 과일급식제를 시행 중에 있음.
	문 제 점	• 학교 과일급식제 도입은 경기침체, 과일수입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게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학교 과일급식제의 전국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임.
	개선방안	•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예산 확보, 물량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 공급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공급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현 황	• 축산업의 규모화 및 전업화(專業化)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한다)상 무허가 상태임. • 환경부에서는 2012년 5월 7일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2014년 3월 24일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함. • 그러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이 확대됨.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함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에 앞서 축산 현실과 괴리된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고, 이후 2013년 2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규 등을 개정하였음.
	문 제 점	• 정부는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 (2015.11.11.)을 마련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함. • 그러나 2017년 5월 말 기준 전체 적법화 대상 60,190호 중 약 4.5%(약 2,700호)만이 적법화가 완료되어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개선방안	• 이와 같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 첫째, 이행강제금 및 측량비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축사 제한거리 기준 강화, – 셋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의식한 적법화 의지 부족 등으로 지적됨. • 따라서 향후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과 동시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 연계하여 농가들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동시에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아젠다 발굴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인력 확보 대책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 인력인 수의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 • 이와 같은 공수의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사를 긴급 동원할 수 있으나, 최근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영리법인의 증가와 반려동물 분야의 동물병원의 증가로 국가 재난 시 공수의 동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선방안	• 장기적인 과제로 반려동물로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진출방향을 축종별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수의대학교 교육과정을 축종별 · 과목별 전문의(專門醫) 제도를 도입 •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동물 분야 등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 단기적인 과제로 공수의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
AI 대응에 있어 백신접종 방식 도입 검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2003년 12월 10일 처음 발생한 이후 2017년 6월 15일 현재까지 총 10차례 발생했음. • 이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발생 원인이 철새 등에 의한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이 아니라 상재화 · 토착화의 우려도 제기됨. • 따라서 일각에서는 살처분 위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류인플루엔자에도 구제역과 같이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는 질병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모든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이 상시 발생하는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살처분과 함께 백신 접종을 병행하고 있음.
	개선방안	• 현재와 같이 AI가 매년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축산기반의 존속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예방접종 방식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백신접종 근거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첫째, '백신 미사용 청정국' 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어 가금류의 축산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예방 백신 접종의 경우 가축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무증상 잠복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염병의 상재화 및 바이러스의 변이를 촉발할 수 있음. – 셋째,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소요와 그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사육 산란계 개체 수는 4천 만~1억 마리이며, 백신접종 대상은 이와 같은 산란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다만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 개발과 접종 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은 현시점에서 적극 검토
가축 사육환경 및 시설 개선 대책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국외 바이러스 유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공장식 또는 밀집식 사육에 따른 사육환경의 악화로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특히 AI의 경우 감염 시 집단 폐사하는 현재의 사육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음. • 한편 2010년 구제역과 AI 발생 이후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2013.2.23.)되어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일정 지역 내 사육밀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젠다 발굴

		• 최근 발생한 AI의 경우 일본은 살처분된 가금류는 2017년 1월 15일 기준 약 114만 수였으나, 한국의 경우 1월 23일 기준 약 3,000만 수가 넘었는데, 이는 일정지역 내에 사육밀도가 일본에 비해 한국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일정지역 내 고밀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단위별로 사육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단위별로 축산업 허가수 및 등록수 등 사육농가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내 전체적인 축산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정수(定數)를 조절해야 함. – 둘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육농가와 사육농가 간, 사육단지와 사육단지 간 일정거리를 제한하는 방안 – 넷째, 지역별 가축양분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 –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인증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의 확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 개선	**현 황**	• 농식품부는 2013년 5월 27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직거래 등 유통효율화를 위한 대안 유통경로 육성에 힘쓰고 있음. • 2017년 농식품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 성과확산에서 선제적 · 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 효율화의 일환으로 신 유통경로 확산을 통해 그 비중을 2016년 18.4%에서 2017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힘.
	문 제 점	• 로컬푸드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증받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 로컬푸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인증 받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별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인증제도가 필요 • 로컬푸드의 특성상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되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인증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그 예로 중앙정부에서 ‘로컬푸드 인증제 엠블럼’을 공식 제작하여 제공 및 홍보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인증 받은 업체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임.
마늘, 양파 통계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현 황**	• 통계청은 매년 발표하던 시기에 맞춰 2017년 4월 27일에 ‘2017년 마늘 · 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발표함. – (마늘 재배면적) 2만 4,864ha로 전년 대비 19.8%, 평년 대비 1% 증가 – (양파 재배면적) 1만 9,538ha로 전년 대비 1.8%, 평년 대비 3.1% 감소
	문 제 점	• 통계청의 마늘, 양파 통계 조사방식에 의한 재배면적과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라 한다)의 농업관측본부에서 발표하는 재배면적이 상이하여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마늘의 경우, 농경연에서는 2만 2,220ha로 평년보다 10.6% 감소(통계청 기준은 1% 증가)한 것으로 발표,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물 최근 5개년에서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값량)를 3만 톤 증량했음. • 양파의 경우, 농경연에서는 1만 7,959ha로 평년보다 10.9% 감소(통계청 기준은 3.1% 감소)한 것으로 발표,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TRQ 조기 운용을 검토하였고 올해 양파 TRQ를 5만 톤 증량했음.
	개선방안	• 효율적인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방식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

아젠다 발굴

		• 더욱이 거의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재배면적 통계 발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상호 협의를 통해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의 예측정확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
가뭄 관련 대책의 필요성	현 황	• 1973년 기상청의 관측 시작 이후 두 번째로 큰 가뭄이 발생하여 농업 부문의 피해가 큰 상황임. • 6월 말 모내기 철 가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가뭄피해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임.
	문 제 점	•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 봄철의 가뭄을 대비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었으며, 5월 25일부터는 가뭄해소 시까지 실시간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가뭄대책 상황실' 을 설치하고 가뭄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가뭄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는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개선방안	• 이상기온 현상 등 기후적인 요인은 불가피하지만, 예측력 제고를 통한 정확한 기상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 • 추가로 그동안 예산이 투입된 각종 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
할랄식품 수출 활성화	현 황	• 농식품부는 2015년 '농식품 수출정책의 추진 방향' 에서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희망으로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문 제 점	• 할랄 소 도축장 사업은 2016년 공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이에 대한 예산 50억 원이 불용되는 등 2016년 할랄식품산업 육성 사업 예산 95억 원 중 38억 원(약 40%)만 집행되었음. • 할랄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인증절차 필요한데, 최근 무슬림 국가들도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인증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 또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수출이 부진한 경우 국내에서 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할랄식품은 이러한 대안 적용이 어려운 현실임.
	개선방안	• 할랄식품 시장 동향 등에 대한 기초 정보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할랄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펼쳐야 할 것임. •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국내 식품시장을 겨냥한 할랄식품의 국내 판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수출 부진 시 국내 소비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전략	현 황	•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살펴보면, 도매 거래 기준으로 공판장 거래금액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2013) 194,913백만 원 → (2014) 204,399 → (2015) 205,333 • 하지만 수출 금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준 28,460천 달러로 2010년 103,067천 달러 보다 72.4%나 감소
	문 제 점	•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이후 화훼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내 화훼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함.
	개선방안	•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위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훼 수출 증대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이 개최한 '2017 수출화훼 국제심포지엄' 에서는 다양한 수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친환경 재배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 화훼를 재배 – 우량 신품종을 개발 · 육성하고 수입국에서 바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완성형 상품을 개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II)"(2017.8.1.)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등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주요 일간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특별 기자회견 개최, 8.17.]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며,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적폐청산, 안보문제, 지방분권**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 가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현안	문재인 대통령 답변 주요 내용
지방분권 개헌	• 2018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 약속,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개헌 추진 1)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 – (개헌 추진 2)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
한·미 FTA	•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 –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미리 조치
적폐청산	•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 –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지속되어 제도화, 관행화, 문화로까지도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
복지재원, 증세 관련	•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 가능 –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
부동산 대책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 중이며, 곧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
한·일 관계	•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 –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현재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 진행 중이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

아젠다 발굴

현안	문재인 대통령 답변 주요 내용
북한 및 안보문제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 –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같은 입장 •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 •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기타	• [지역공약]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 • [탕평 인사 관련]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 • [공영방송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

자료: "[문재인 정부 100일][라이브 업데이트]특별 기자회견 질의 응답" (경향신문, 2017.8.17.),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서울신문, 2017.8.17.)

한·미 FTA 협상 주요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8.22., 서울] 한·미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 시작,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 진행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12일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7.24일 개정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 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밝히며,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고 답신

– (정부)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8.17일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을 강조

자료: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22일 서울서 개최" / "한미 FTA 줄다리기 '팽팽' …22일 공동위 특별회기" / "한미 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공동위 22일 서울 개최(종합)" / "한미 FTA 공동위 22일 서울서 열린다" / "오는 22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치열한 공방 예상" (KBS, 서울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2017.8.18.),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8.22일(화) 서울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8.18.)

아젠다 발굴

❑ 고향세 도입 관련 여론 조사 결과

○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장수), 여론 조사 의뢰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고향세 도입 찬성]**
응답자의 78.3%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 '적극 찬성' 19%, '찬성' 59.3%

※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기부처)** '태어나고 자란 곳' (55%) > '부모의 고향' (12.3%) > '현 거주지' (26.6%) 순
- **(기부금액)** '6~10만 원' (33.8%) > '11~50만 원' (17.2%) 순
-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찬성' (65.8%), '반대' (18.9%), '모르겠다' (15.3%)

○ 고향세에 대한 국민 여론과는 달리 정부의 고향세 입법 추진은 소걸음. **고향세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정부입법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국회의 고향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

※ 기획재정부가 8.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입법내용이 빠져 있고, 행정안전부가 8.10일 내놓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역시 고향세 도입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을 담지 않았음.

○ **고향세 관련 의원입법**은 2016년 7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년여 사이에 5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

※ (전재수 의원) 5.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 관련법 4건을 대표발의.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고 세금경감 혜택을 받는 게 주요 내용

※ (홍의락 의원) 6.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정부, 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인 고향세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진행 중**

- **(행정안전부, 고향세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7.21.) 갖고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

자료: "국민 10명 중 8명 "고향세 도입하자"" (농민신문, 2017.8.16.)

해외단신 OECD,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 OECD,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17.8.1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포용적 성장과 조화가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

※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OECD, 2017.7.)

〈성장과 기후변화를 위한 공동노력〉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건

○ G20 국가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들이 힘을 모아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 달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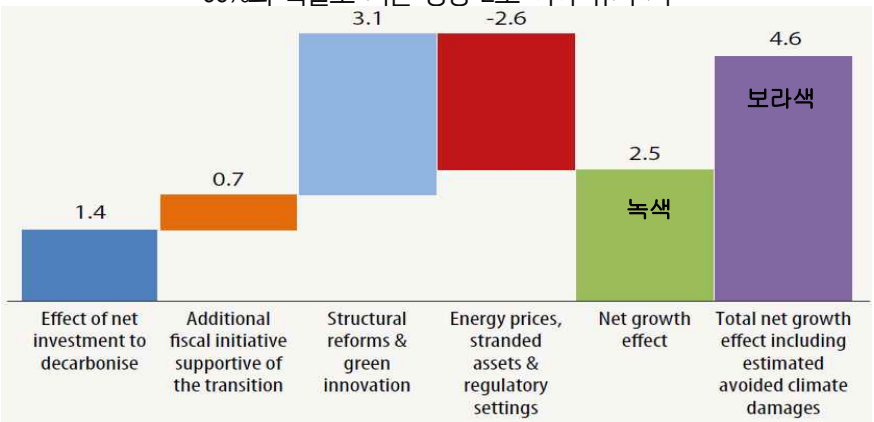
2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 효과

○ 과감한 기후 정책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성장도 촉진 가능

○ OECD 연구 결과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

▌G20국가들이 기후정책과 경제개혁을 동시 추진 시 예상되는 장기성장효과(%) ▐

<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 2도 이하 유지 시 >



※ (녹색) 205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 (파란색) 저탄소화를 위한 순투자효과) + (주황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 효과) + (하늘색) 구조개혁 및 녹색혁신 효과) – (빨간색) 에너지 가격 상승, 규제비용 등)

※ 보라색: 성장효과(녹색)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회피 규모를 반영한 숫자

3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OECD의 전망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2030년간 인프라 투자에 매년 6.3조 달러가 필요

○ 기후변화를 고려한 66%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할 경우 2016-2030년간 매년 6.9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

- 즉, 기후변화 고려 시 약 10% 수준의 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 평균 1.7조 달러 전망)으로 상쇄 가능

○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저탄소 인프라 투자 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4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전환

○ 비록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많은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추진 시 정치적 대립에 직면

- 온실가스 고배출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정부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근로자(특히, 화석연료 사용 분야)들을 위한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

- 근로자 재교육 및 이동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전 대응계획과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기후친화적 발전을 위해 중요

○ 기업·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부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 절차

5 과감한 전환을 위한 자본 조달

○ 정부는 민관협력 증진, 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및 상업화 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

- 이를 위해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 저감기법 및 혼합금융이 개발되었으며 이런 기법의 활용이 좀 더 확대될 필요

○ 다자개발은행(MDB)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타 국가의 지식·전문성·혁신 등도 전수 가능

○ 정부 정책은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방식을 주류화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근거한 효율적인 자산 가격 평가에 집중할 필요

해외단신

<주요 정책 제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구조개혁과 국가 발전 전략에 통합	• 생산성 향상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 •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 관련 R&D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재정정책을 재평가하고 최적화 •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성장과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및 정책 간 부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를 추구
2.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가 전체적 노력을 가속화	• 파리협정 이행 메커니즘 감독과 전 세계 감축 노력 현황 파악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험 공유
3. 지속가능한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 정책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일 필요	• 전환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
4.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채택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일치하는 인프라 투자 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 제공을 확대(G20 Global Infrastructure Hub 웹사이트 등 활용)
5.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을 가속화하고 성공적이고 진보적인 보조금 개편 사례에 대해 경험 공유 • 농·임업 및 다른 토지 사용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 • 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공공 조달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에서의 시장 선도를 통해 산업·사업모델 혁신을 촉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강화
6. 전환을 위한 재원 조달	• 위험저감기법, 개선된 환경위험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 조달 노력 확대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시장의 가격결정능력 향상, 기후변화 위험 평가 등을 통해 더욱 기후 일관된 국제금융시스템으로 개선 • 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저탄소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목표를 액션플랜에 반영

국내단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2017.8.10.)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수립, 8.10.]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17.8.9.)을 거쳐 확정

- **(추진 배경)** 최근 **저성장 현상 지속,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분배지표 악화**※

※ (상대빈곤율) 2015년 13.8% ⇒ 2016년 14.7%, (노인빈곤율) 2006년 43.6% ⇒ 2016년 47.7%(통계청)

※ (2016년 월평균소득) 1분위 145만 원, 전년 대비 5.6%↓ vs 5분위 835만 원, 2.1%↑ (통계청)

※ (지니계수) 2015년 0.295 → 2016년 0.304, (소득 5분위배율) 2015년 5.11 → 2016년 5.45(통계청)

- **(추진 목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추진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4대 방향으로 개선,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2) **국민 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3)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4) **빈곤 예방**

○ [주요 내용]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2) 급여별 보장성 강화, 3)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4)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5)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6년 말 163만 명(인구 대비 3.2%)에서 2020년 252만 명(인구 대비 4.8%)으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서 **2020년 최대 3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국내단신

○ [2. 보장수준 강화: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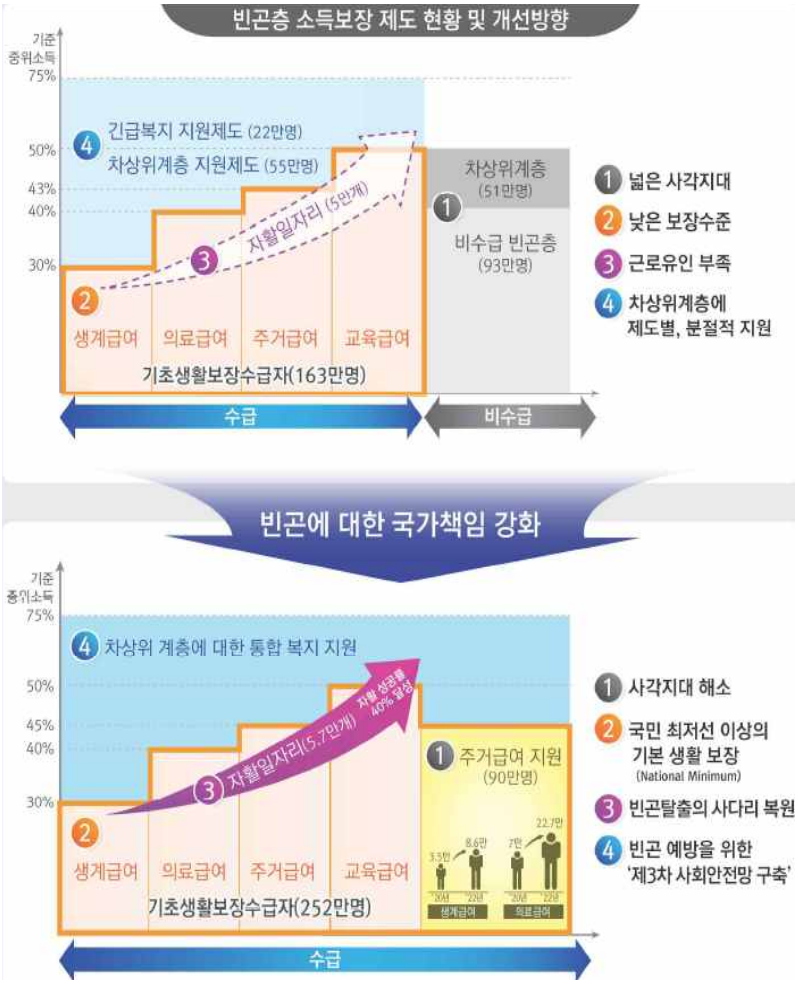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 [3.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자활 일자리 7천 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10만 가구)

○ [4. 빈곤 예방: 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 [5. 이행기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국내단신

❍ **[향후 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2020년 **제2차 기초 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 마련

※ 2020년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제1차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재정추계(의료급여) 실시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 수립 시 반영

▌참고: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추진과제	As-Is (2017년 현재)		To-Be (2020년)
공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163만 명, 103만 가구 (인구 대비 3.2%)	⇨	252만 명, 161만 가구 (인구 대비 4.8%)
보장 수준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수준 1종 1.1%, 2종 6.5%	⇨	본인부담 수준 1종 1.0%, 2종 6.0%
	주거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지원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기준임대료를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평균상승률만큼 인상	⇨	기준임대료를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교육급여 현실화	최저교육비의 절반에도 미달	⇨	최저교육비의 100%까지 교육급여 현실화
빈곤 탈출	자활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 총 5만 개 자활기업 1,200개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 총 5만 7천 개 자활기업 1,800개
	일하는 수급자 인센티브 확충	자활성공률 37.3%	⇨	자활성공률 40%
사각 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 (생계 41만 명, 의료 52만 명)	⇨	생계 13만 명~20만 명 의료 20만 명~44만 명 (29~60만 명↓)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	**(생계급여 구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의료혜택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 의료비 경감
빈곤 예방	"제3차 사회안전망"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별, 분절적 지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 지원 제도화

연구지원 2017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 : 통계청(2017.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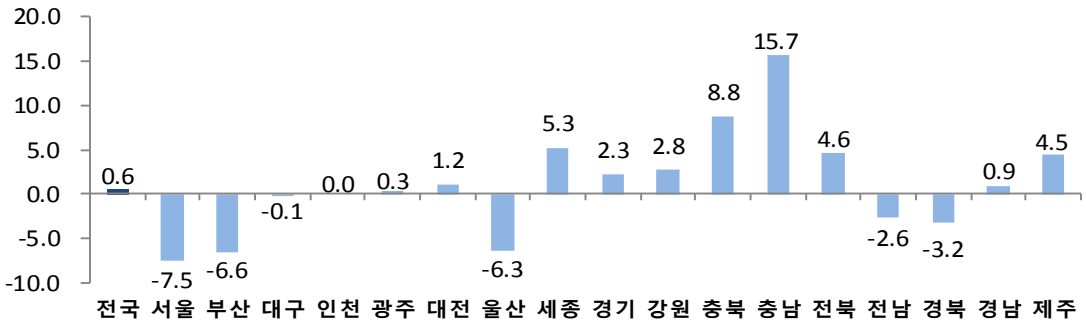
개요

○ [통계청, 2017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8.17.]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역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 분기(2, 5, 8, 11월) 발간

부문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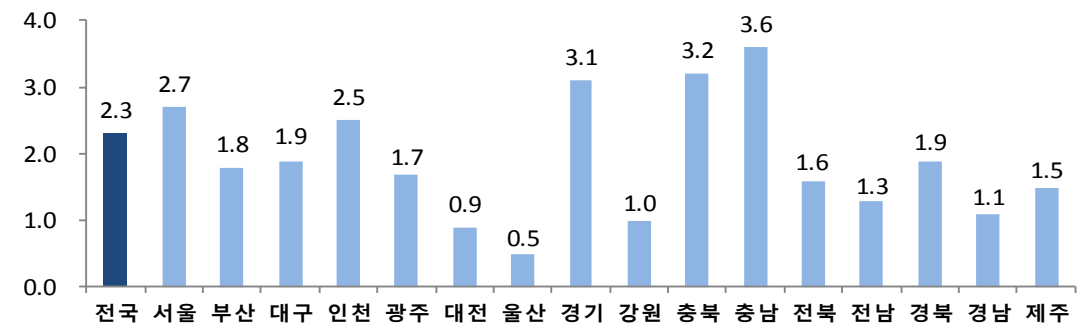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전국) 전년 동기 대비 0.6%↑, (지역별) 서울(-7.5%), 부산(-6.6%), 울산(-6.3%) 등은 감소한 반면, 충남(15.7%)과 충북(8.8%)은 기계장비, 화학제품 및 전자부품 등의 호조로 높은 증가율 지속

▌2017년 2분기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 [서비스업생산] (전국) 전년 동기 대비 2.3%↑, (지역별) 울산(0.5%), 대전(0.9%)은 음식·숙박, 전문·과학·기술 등의 부진으로 전국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남(3.6%)과 충북(3.2%)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의 호조로 높은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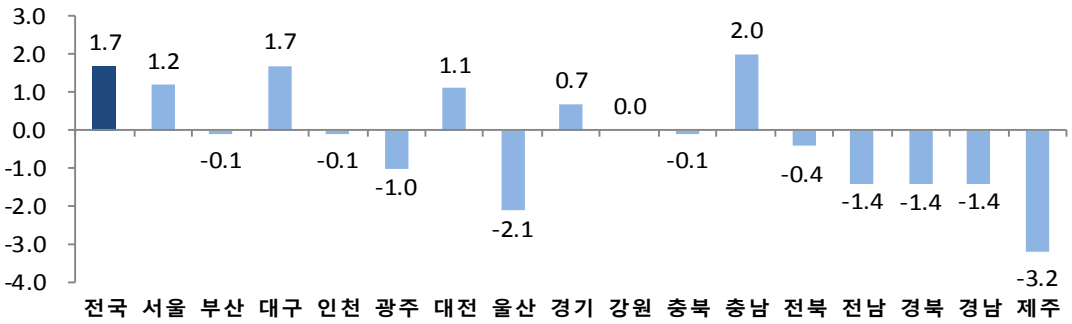
▌2017년 2분기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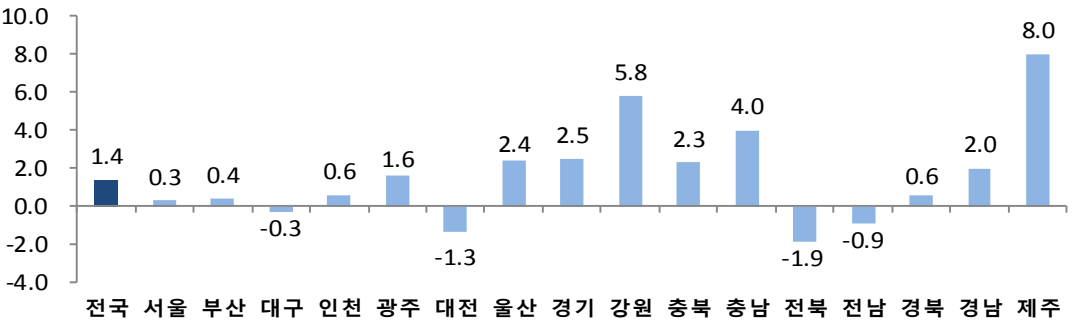
○ [소비: 소매판매] (전국) 전년 동기 대비 1.7%↑, (지역별) 제주(-3.2%)와 울산(-2.1%)은 대형마트,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 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충남(2.0%)과 대구(1.7%)는 슈퍼마켓·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호조로 높은 증가율 기록

▌2017년 2분기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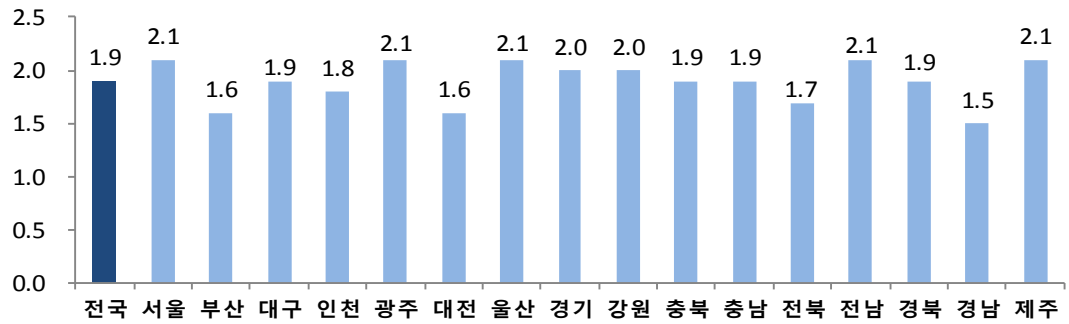
○ [고용: 취업자 수] (전국) 전년 동기 대비 1.4%↑(36만 7천 명), (지역별) 전북(-1.9%)과 대전(-1.3%)은 음식·숙박, 보건·사회복지 등의 고용이 줄어 감소한 반면, 제주(8.0%), 강원(5.8%) 및 충남(4.0%)은 공공행정, 음식·숙박, 교육 등의 고용이 늘어 증가세 지속

▌2017년 2분기 시도별 취업자 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 [물가: 소비자물가] (전국) 전년 동기 대비 1.9%↑, (지역별) 서울·광주·울산·전남·제주(2.1%)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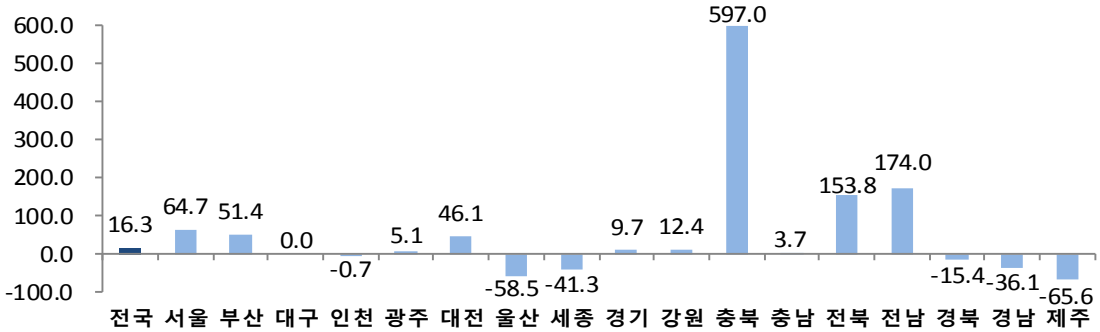
▌2017년 2분기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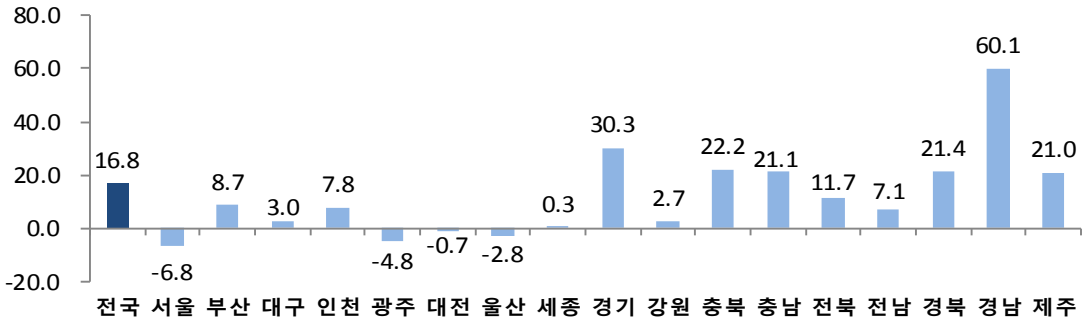
❍ [건설] (전국) 전년 동기 대비 16.3%↑, (지역별) 제주(-65.6%)와 울산(-58.5%)은 사무실·점포, 주택 등의 수주 부진으로 감소, 충북(597.0%), 전남(174.0%) 및 전북(153.8%)은 공장·창고, 발전·송전, 기계설치 등의 호조로 증가

▌2017년 2분기 시도별 건설수주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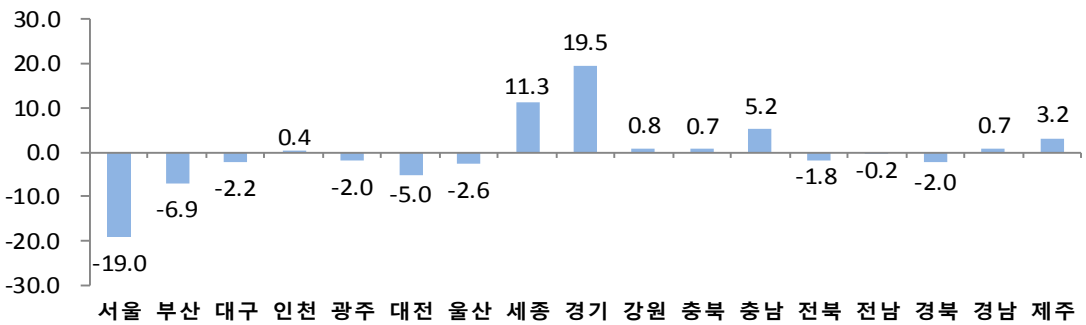
❍ [수출] (전국) 전년 동기 대비 16.8%↑($ 211억 7천만), (지역별) 서울(-6.8%), 광주(-4.8%) 등은 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감소, 경남(60.1%), 경기(30.3%), 충북(22.2%) 등은 선박, 반도체 등의 호조로 증가

▌2017년 2분기 시도별 수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 [국내인구이동] 경기(19,452명), 세종(11,323명), 충남(5,173명) 및 제주(3,209명) 등 8개 지역은 순유입, 서울(-19,010명)과 부산(-6,868명) 및 대전(-5,044명) 등 9개 지역은 순 유출 시현

▌2017년 2분기 시도별 인구 순 이동 (천 명) ▐



2017년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및 투자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8.18.)

❑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예산현황

○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예산현황] 3,368억 원

- (연도별) (2010) 502억 원 → (2011) 420 → (2012) 420 → (2013) 426 → (2014) 600 → (2015) 500 → (2016) 300 → (2017) 200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 및 투자실적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 49개, 총 8,105억 원(정부 4,542, 민간 3,563)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3,563억 원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 (연도별) (2010) 4개/970억 원 → (2011) 5/970 → (2012) 6/840 → (2013) 6/750 → (2014) 9/1,140 → (2015) 7/1,060 → (2016) 7/1,455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단위: 억 원/2017.8월)▐

투자분야별 \ 연도별		펀드결성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일반펀드	농식품일반	650	770	640	450	610	640	755	400	4,915
특수목적펀드	6차산업	–	–	–	100	100	100	100	100	400
	수출펀드	–	–	–	–	130	100	100	–	330
	스마트팜	–	–	–	–	–	–	500	–	500
	8대프로젝트	320	200	–	–	–	–	–	–	520
	소규모경영체	–	–	200	200	100	100	–	–	600
	R&D	–	–	–	–	100	–	–	–	100
	AgroSeed	–	–	–	–	100	–	–	–	100
	창업아이디어	–	–	–	–	–	120	–	–	120
	ABC	–	–	–	–	–	–	–	420	420
계		970	970	840	750	1,140	1,060	1,455	920	8,105
펀드개수		4	5	6	6	9	7	7	5	49

○ [투자실적(2017.7월 말)] 239개 경영체, 324건, 총 4,360억 원(결성금액의 60.7%)

구 분	투자금액(건)	투자비율(%)
농식품분야	3,708억 원(269건)	85
비농식품분야	652억 원(55건)	15
계	4,277억 원(324건)	100.0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